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기업에 수의계약 허용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 혁신성장 유도

정부가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계약 분야에 일자리 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를 도입한다.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오는 7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조달, 기업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공공계약을 통해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이 하는 계약에서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높은 기업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일자리 창출 기업 우선 낙찰제로, 실적을 고려해 조정된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심사하는 방식이다.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입찰가산점이 부여되는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수의계약이란 경매나 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적당한 상대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입찰제한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된다. 공공계약 분야에서 참여 기업은 노무용역 계약체결시 4대보험 지급, 포괄적 재하청금지 등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가 도입된다. 경쟁적 대화방식은 발주기관이 요구에 맞춰 기업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최적의 업체를 가려 일종의 공모전 형태로 이해된다.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가 우수 R&D 제품 생산자는 모든 국가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신기술과 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공공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개정령안에 담았다.

입찰공고시 주요 단가의 적용기준과 법정요율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기관의 잘못으로 계약금액이 잘못 산정돼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계약의 분쟁조정 대상은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원가계산 용역기관 설립요건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객관적인 예정가격 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뉴스

내일채움공제 가입하세요

전북중기청, 내달부터 청년재직자 신청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6월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전북 2개) 및 기업은행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 추경 예산 통과에 따라 6.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군 제대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연

령은 39세로 제한한다.

적립구조의 경우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하고,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게 된다.

공제적립금은 청년근로자 월 최소 12만원(5년)+기업 월 최소 20만원(5년)+정부 월 평균 30만원(3년, 최대 1,080만원)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하여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

또한,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제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김영태 기자

유통업체, 전년비 매출 ↑

온라인 매출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 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1.0%)과 온라인 부문(15.9%)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전체 매출이 6.3% 늘었다.

오프라인은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감소했다.

편의점은 점포수가 9.9% 늘어나고 도시락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어났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비식품군의 매출이 줄어들었음에도 매출비중이 높은 식품군이 성장해 전체 매출액은 0.3% 증가했다.

백화점은 가정용품 부문(11.3%)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잡화(-7.2%) 및 아동·스포츠 부문(-7.1%) 매출 역신장의 영향으로 전체 매출은 0.2%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매출비중이 높은 휴일이 작년보다 줄어들어 전체 매출은 4.5% 감소했다.

점포당 매출액은 전체 매출이 크게 증가한 편의점의 점포당 매출액만 0.1% 늘어난 가운데 대형마트(-4.9%), 백화점(-0.2%), 기업형슈퍼마켓(-0.3%)은 줄어들었다.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 증가 모두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온라인 판매는 주방 가전 기획전 등에 따른 가전·전자(55.9%) 부문을 중심으로 전체 매출이 25.0% 증가했다.

온라인 판매증가는 매출비중이 높은 가전·전자(14.9%)와 생활·가구(16.5%) 부문 매출이 늘어나며 전체 매출은 12.4% 늘었다. /김영태 기자

대법원, 비트코인 경제적 가치 첫 인정

범죄 수익 비트코인 몰수 1심 기각 → 2심 인정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재산도 몰수...원심 정당”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며 범죄수익으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몰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재산 가치를 인정해 범죄수익 몰수를 인정한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 9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며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을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면서 “(음란물 유통 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인 인터넷 사이트 ‘AVsnopclub’을 운영하면서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1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와 그 가족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 이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

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1심과 달리 비트코인의 몰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압수한 216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만 한정했다. 또 6억9580만원을 추징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한다”며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 파일 형태로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안씨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해 매우 불합리하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은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사기관이 압수할 당시인 지난해 4월17일 기준으로 216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5억원이었으나,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약 18억원으로 올랐다. /뉴스



LG전자, 가격 낮춘 올레드 TV 출시

LG전자가 가격을 크게 낮춘 올레드 TV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LG전자 모델들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LG 베스트샵 매장에서 LG 올레드 TV를 살펴보고 있다.

LG전자가 가격을 크게 낮춘 올레드 TV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LG전자 모델들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LG 베스트샵 매장에서 LG 올레드 TV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

융합섬유, 프리뷰 인 서울 2018 전시회 지원

예코융합섬유연구원(원장 김인관/이하 융합섬유연)은 ‘대한민국 섬유교역전, 프리뷰 인 서울(PIS) 전시회’에 참가할 전북 섬유·패션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 지원은 전라북도 친환경 섬유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섬유·패션기업의 시장개척을 통해 국내·외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한민국 섬유교역전, 프리뷰 인 서울(PIS) 전시회는 국내 섬유·패션 전문 전시회로, 2018년 9월 5일(수)부터 9월 7일(금)까지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도내 섬유·패션기업 성실섬유 등 11개사가 참가하여, 72건의 바이어 상담 실적, 약 30억원 수주 상담의 성과를 이루었다.

/익산=장양원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도순저수지 환경정화 행사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차상철)는 30일 익산시 용화리에 위치한 도순저수지에서 환경정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익산지사 직원 30여명이 참여 한 행사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해 일심동체 해 도순저수지는 물론 인근 마을까지 정화범위를 확장하여 유역 오염원 감시활동도 병행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보호에 이바지 하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한편, 차상철 지사장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